

○ 한재준 교수의 각 정부 금융정책 정리, 이창민-정준영 교수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성과 분석 좋은 공부됐다. 이에 대해서는 학문적 평가 차원에서 다른 분들 고견 듣는 것으로 대신하려한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관심 많이 쏟아지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여부와 방향에 대해 소견을 제시할까 한다.

○ 경제정책 다루는 정부조직 개편 전체 부터 살펴봐야 할것이다. 예산과 결산,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경제기획원-재무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경험 거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때 재정경제원 거대부처가 외환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 아니었느냐는 주장 일리 있다.) 지금은 예산과 결산을 하나로 묶어놓고 금융은 떼어냈는데 정작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해버린 점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해야 하느냐를 고민해 봐야한다.(경제부총리가 국회 상대하고 다니는 것 보면 현재의 업무관장 영역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넓다.)

○ 금융 감독은 금융행정 체계에서 정책-감독-집행 세 요인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 축이다.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 권한과 책임 따지고 기능 중첩 따지는데 함몰돼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수요자들 입장에서 접근이다. 새 정부의 금융 관련 공약을 보면 금융소비자보호특별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눈에 띄인다.일반가입자나 금융고객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원 필요하겠지만 다른 측면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에게는 또 하나의 시어머니 생긴다는 점에서 반갑지 않다고 얘기한다.

(장하성 실장이 금융학회장 때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체계에 금융감독민간 특별위원회를 뒤탈다는 주장 한적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전 여부 보고 논의해야.)

○ 새 정부 공약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것 하나는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이다.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 있다. 현행 금융감독원의 재원을 피검 기관들이 부담하는 방식 옳으나,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따져보자. 금융소비자보호원 만들면 그 재원도 이런 식으로 떼어낼텐데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아닌가.

○ 정책과 감독이 구분되는 것인지 의문이다.차라리 시장에 대한 정책과 감독, 산업에 대한 정책과 감독으로 나누는게 맞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건전성 요건 강화와 금융산업 지원 방안이 부딪치는 문제는 일선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나.

○ 최운열 의원이 대선 전에 주장했던 방안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의 의결기구로 두고 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통위와 비슷한 구조다.이 방안에는 위원장과 원장을 하나로 일원화하느냐 문제 있다.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고쳐서 길트면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다. 금융감독원이 정부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 가장 큰 부담이고 이 장애를 뛰어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뜯어 고칠거면 금융감독원을 계속 반관반민으로 둘 것이냐 정부조직으로 바꿀 것이냐 결정해야한다.근본적인 개선방안 접근이다. 반관반민 감독기구 모델 거론하면 영국(PRC,FCA)을 예로 드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금융부문 내부에서 민간자율규제 관행 가졌던 점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하기 힘들다.

○ 근본적으로 정부조직이든 금융행정체계든 5년 단임 정권이 그 때마다 합치고 쪼개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